

비판받을 권리, 비판받을 의무: 학문의 자유를 위한 조건

서 병 훈

충실히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다양한 시각에서의 논의 필요

온 럼픽이다. 뭐다 해가면서 마음이 들때 지내는 동안 한국민의 자기인식이 실상 이상으로 부풀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듦다. 경제의 외형적 규모는 남 부럽지 않게 커졌고, 그래서 선진국 진입이라는 아무진 꿈이 그다지 먼 미래의 일 같지 않게 여겨지지만, 그 화려한 포부를 한 꺼풀 벗기고 나면 부끄럽기 한이 없는 한국 사회의 단면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 것이다.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 하더라도 다 아는 일이다. 그래서 학문의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진

부하기조차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천부의 기본권이라고 인식되어 온 학문의 자유가 새삼스럽게, 아니 여전히 문제가 되는 처지에 선진국 진입을 꿈꾸어 왔다니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물염치’가 가히 수준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문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가 현 시점에서 축발된 배경에 불순한 권력의 의지가 자리잡고 있음을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이것을 우선 전제해 둔다. 그러나, 비록 원치 않는 상황의 부신물이기는 하나, 차제에 학문의 자유에 대해 조용히 성찰해 보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이래 저래 훼손된 우리의 지적 자존심에 조그마한 위안이 될 수도 있겠다. 사실 지금까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그 원론적 당위성

에 압도된 나머지 상식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감이 든다. 법조계의 경우야 물론 예외이겠지만, 학문을 직업으로 삼는 교수 사회의 경우에서조차 그러한 당위성의 현실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기울여 보지 못했던 것이다.

한번 더 짚고 생각해 보면, 일련의 의문이 생겨난다. 우선 학자가 자신의 연구결과를 자기의 책상에만 쌓아 두지 않고 사회를 향해 발표하게 마련이고 따라서 그것이 사회에서 유통될 수밖에 없다면, 그 파급효과와 학문의 자유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좋을까? 둘째, 대학교육이라는 장에서 학문의 자유가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는가? 셋째,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체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까? 최근 한국 사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듯이, 예비 학자인 대학원생 나아가 대학생 또한 전문 학자와 동등한 수준의 학문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학문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학자가 행하는 활동의 어느 부분까지를 학문활동으로 간주해야 옳은가 등등.

이 글은 학문의 자유와 연관되어 제기될 수 있는 많은 물음 중에서도, 특히 왜 학문활동의 자유가 소중하고, 왜 그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우선 따져 보기로 한다. 동시에 이 글은 학문의 자유가 어차피 사회 속에서 향유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학문활동의 자유가 온전히 향유되려면 학문적 비판의 활성화가 한 뮤음으로 전제되는 것이 무엇보다 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육의 울타리 안에서는 학문의 자유가 일정한 정도 자기규제를 감내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설명하려고 한다.

2. J. S. 밀의 자유론

1) 자기발전을 위한 자유

학문의 자유를 논하면서 우선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 1806~1873)이다. 『자유론』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밀이지만, 그를 특히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도 더 개인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도 또한 그 자유의 사회적 의미를 힘주어 주장했기 때문이다.¹⁾ 따라서 학문의 자유를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밀의 생각은 훌륭한 길잡이가 된다. 그는 오늘날 널리 알려지고 있는 소위 ‘적극적 자유’ 개념의 단초를 연 사람이다. 자유란 단순히 남의 간섭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윤리적 발전의 목표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밀은 개인의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 있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자유는 당연히 그 자유를 향유할 주체의 목표와의 연관 속에서 그 성격이 규정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왜 자유가 소중한 것인가?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설정해 나갈 수 있을 때, 최선의 자기 발전을 달성할 수

1) John Stuart Mill, *On Liberty* (Indianapolis : Bobbs-Merrill, 1982) 및 서병훈, 『열린 유토피아 : 존 스튜어트 밀의 사회주의 사상』(서울 : 나남출판사, 근간) 참조.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따져보자.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대로 마음놓고 공부하고 발표하기 위해서인가? 밀에 의하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학문의 자유가 주어져야 학문의 발전이 기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밀의 자유 개념은 자유를 향유할 주체의 윤리적 목표, 즉 자기 발전을 우선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2) 자유의 원칙

밀은 자유의 영역을 셋으로 나눈다. 첫째,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이다. 이것은 실제적 또는 사변적, 과학적, 도덕적 그리고 신학적 등 모든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의견이나 감정을 품는 것에 대해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각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개성에 맞게 자기의 삶을 설계, 계획하고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각자의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일이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설령 다른 사람의 눈에 어리석고 잘 못되거나 틀린 것이라고 보일지라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셋째,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여 사람들간에 자유롭게 결社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강제나 속임수에 의해 억지로 끌려 온 경우가 아니라면 성인들이 자유롭게 모임이나 단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의 영역을 설정한 뒤, 밀은 자유가 향유되기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어떤 행동이 오직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칠 때,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생각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같으면, 그 개인을 가르치거나 충고, 설득하고 아니면 상대를 해주지 않는 것만이 사회가 비난이나 거부의 표시로써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의 전부이다. 둘째, 한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사회적, 법률적 처벌을 동원할 수 있다.

자기에게만 연관되는 일(self-regarding acts)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일(other-regarding acts)을 구분하면서, 개인 행동의 성격에 따라서 자유가 향유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고 하는 밀의 사상은 학문의 자유를 논할 때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우선 학문의 자유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생각의 자유에 대한 밀의 관점을 검토해본다.

3) 생각의 자유

밀의 정치사상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공리주의적 인식론과 도덕적 당위론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도 이런 혼란이 목격된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밀은 자유가 인간의 자기 발전을 위한 방편인 동시에 그 구성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밀은 생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찾는다. 그 논의를 살펴 보자.

정신적 복리(well-being)는 인간의 다른 모든 복리의 기초를 이룬다. 바로 이 정신적 복리를 위해 꼭 진요한 것이 의견의 자유와 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의견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압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돈키호테가 아니라면 남의 의견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둘째, 혹시 어떤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흔히 그런 것처럼,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기 마련이다. 이에 반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품고 있는 견해 또는 대표적인 생각 중에는 틀린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런 경우 서로 대립된 견해들끼리 대비가 됨으로써 가려진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 셋째, 한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에 대한 엄격하고 충분한 논의와 비판적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편견을 품을 뿐 아니라 그 주장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대해 확신을 못 가질 수 있다. 넷째, 그러한 주장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가 전제되지 않을 때, 그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믿음이 약화될 뿐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받아들임으로써 성격이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감퇴된다. 그 결과, 그러한 진리가 그저 하나의 형식논리로 쇠퇴하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성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그 진리를 확실하게 마음 속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장점도 사라지게 된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지식인들에게 해가 될 뿐 아니라, 그 결과 사람들의 도덕적인 발전에도 또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의견을 폐기시키고자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결코 확

실히 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어떤 한 생각을 역압한다는 것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인류에게 강도질하는 것과 같은 악을 저지르는 셈이 된다. 만일 그 생각이 옳다면, 그 행위는 진리를 짓밟는 일이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된 의견을 억누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설령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생각을 역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것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밀의 논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의견은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부분적 진리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서 밀은 어떠한 종류의 ‘확신’에 대해서도 동의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절충론을 자신의 방법론으로 분명히 했다. 생각의 자유에 대한 그의 입장도 이와 같은 논리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 자신의 논리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타인의 주장을 자의적으로 폐기하는 독단은 금지되어야 한다. 어차피 인간의 생각이 주관적 오류를 벗어 나기 어렵다면 토론을 통해 보다 높은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도그마를 강요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학문의 효율적 재생산을 가로막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다.

3. 학문의 자유와 사회

생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를 밝힌 뒤, 밀은 그 생각을 표현하는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고 출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련을 맺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와는 상이한 원칙에 의해 규제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 또한 생각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하고 또한 생각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에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그 양자 사이를 실질적으로 떼어 놓기가 어렵다. 이러한 밀의 논점은 그가 제시한 자기관계 / 타인관계의 구분과 연결해 볼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다.

밀은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행동에 관한 한 전적인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자유의 원칙 첫 머리에서 밝혔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 가운데 오직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타인에게는 아무런 파급효과를 내지 않는 일이 과연 있을까?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때 또는 가장이 술만 마시고 일을 게을리 할 때, 심지어는 재능이 뛰어난 인재가 그 재능을 썩힌다고 할 때, 그 자기관계 행동이 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 즉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밀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회 속에서 살아 가는 인간이기에 각자는 가족과 이웃을 포함한 사회로부터 많은 은덕을 입고 산다. 그 은덕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도움받은 만큼 갚는 것은 고사하고 계속 귀찮은 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자기관계 행동이라고 해서 사회적 의무를 도와시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다. 나아가 인간은 사회성(sociality)이라고 하는 타고난 본성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타적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파악

하게 되기 때문에 타인의 복리에 대해 관심을 쏟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인간은 자기관계 행동에 대해 스스로 제한을 가하게 된다.

자기관계적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타인의 복리를 고려하는 틀 속에서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밀의 생각은 학문의 자유를 논하는 이 자리에서 의미심장하게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학문의 자유 또한 자신/타인의 경계선상에서 어려운 문제점을 야기한다.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혼자만 읊미하거나 자신의 책상 위에만 쌓아 둔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은 타인, 즉 사회를 향해 발표, 통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학문이란 자신관계의 영역을 넘어 타인관계의 행동으로 전화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연구자의 학문 자유와 타인의 복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밀의 생각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학자의 개인적 학문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무슨 내용을 어떤 방법과 시각에 의존해서 연구하든 그 연구자의 학문적 개별성(individuality)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학문의 자유는 인간이 향유해야 마땅한 자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러한 자유가 주어질 때, 학문적 성과도 최대한 수확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의 연구결과는 학자 개인의 올타리를 벗어나 부단히 사회의 영역으로 스며 든다. 현대 사회에서 이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매스 미디어는 학자의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대중에게 전달한다. 뿐만 아니라 학자들

또한 대중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학문적 소신을 피력한다. 학문 연구가 타인관계적 행동으로 전환되는 상황 속에서 학문의 자유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문학성이 미미한 '음란성' 소설을 학자가 대중을 향해 유포한다면, 그리고 생물학자가 가공할 살상무기의 제조방법을 대중을 대상으로 강의한다면, 이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하는가?

4. 비판의 권리와 의무

학문의 자유가 온당하게 향유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야기시킬지도 모를 부작용에 대한 방파제로서 학문활동에 대한 비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비판을 받는 것이 학문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권리라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부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자신의 연구를 향상, 발전시키는 일에 높은 가치를 둔다. 자신의 연구결과를 학문사회에다 유통시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타인으로부터 받는 건전한 비판이야말로 자신의 학문이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보배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판받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사회 속으로 유통될 학문이라면, 특정 연구결과의 수준이나 방법론, 윤리적 합의(含意)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학문의 자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의무와도 같다. 결국 비판을 받는

것이 학자에게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인식이 확립된 터전 위에서만이 학문의 자유가 제대로 꽂피울 수 있다.

인간의 이상을 자아실현에서 찾으려 하는 마르크스는 자아실현의 요소로서 인간 능력과 소질의 구현과 더불어 外現(externalization)을 꼽는다. 詩作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습작을 다른 사람에게 읽히고 싶어 한다. 타인으로서 시를 읽고 기쁨을 느끼게 해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타인으로부터 건설적인 비판을 받으려는 목표도 중요하다. 타인의 비판은 시인의 창작에 도움이 될 것이고, 도움을 받은 시인은 보다 나은 시를 써서 사회에 보답하게 된다. 능력(power)과 필요(need)의 순환고리를 통해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사회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적 상황의 출발점이 바로 외현에서 발견된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사회에다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비판을 받으면서 학문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학문의 자유는 '비판받아야 할 권리'를 전제로 해야 한다.²⁾

동시에 학자는 '비판을 받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학자 개인의 연구 결과가 부단히 사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학문은 분명히 타인관계 행동의 영역 속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어떤 연구 결과가 사회의 통념적 윤리를 위협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자유를 강변한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수준'이라는 측면에서도 자유에 대한 건설적 강제가

2) Jon Elster, "Self-Realization in Work and Politics : The Marxist Conception of the Good Life", T.R. Machan, ed., *The Main Debate* (N.Y. : Random House, 1987), pp. 114~116.

필요하다. 비판의 잣대가 살아 움직인다면, 저 수준의 연구결과가 학문의 자유라는 외투를 빙자하여 안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일은, 한 시대의 정의나 도덕이 불가분 상황적 진리를 떠게 된다는 점이다. 자동설을 주장했다가 곤욕을 치른 갈릴레오처럼, 학자의 소신이 부당한 편견에 의해 팝박받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배제되기 어려운 학문 영역의 경우,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학문의 수준이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학문활동이 말 그대로 역사의 심판에 맡겨지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학문적 공동체(scientific community)가 넓게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친다면, 이러한 주관성의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학문 공동체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이다. 특정 연구에 대한 평가는 어차피 상대성의 제약에 구속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양한 주견과 시각이 자유경쟁의 기제를 거치게 되면 최고의 수준과 최선의 객관이라고 하는 학문적 이상에 보다 근접할 것이다. ‘시장’은 비판을 매개로 하여, 살아 남을 학문적 주장과 폐기되어야 할 연구 결과를 냉정하게 가려 낼 것이다. 학문 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이자면 학문의 자유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학문 공동체의 비판적 감시에 의해 학문의 자유는 일정한 자기정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학문의 자유를 구성하는 기

본인자는 바로 공정한 비판이다. 공정한 비판은 자유경쟁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자유방임주의 시장체제가 최선의 선택이다. 학자의 연구 결과를 정치적 관점에서 재단(裁斷)한다거나, 정당성을 결여한 기관이나 개인이 ‘심사’한다는 것은 시장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다. 학문적 주장의 타당성이나 그 수준의 높고 낮음은 학문 공동체의 자유비판에 의해 판가름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학문 시장이 외부 요인에 의해 너무도 손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문적 비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학문 공동체 스스로도 자유비판의 소명에 충실하지 못하다. 각종 학회에서 발행되는 학회지 중에서 엄정한 비판의 여과과정을 거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학문의 자유가 향유될 수 있는 하부구조를 우선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5. 학문의 자유와 대학

대학에서 강의하는 학자의 경우, 그 강의가 학문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물론이다. 그러나 동시에 교수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도 지닌다. 학문활동의 연장선 상에서 자유롭게 강의를 구성, 진행할 권리를 향유하면서도 피교육자인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하는 것이다.

교육자로서 교수는 기존의 학설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교수는 학문적 주관을 지닐 수밖

에 없다. 그리고 적어도 사회과학에 관한 한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확보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가르치는 사람의 학문적 소신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학문적 자유와 교육자적 양식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성이 있다.

이 문제는 쉽게 구획될 성질이 아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수가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 위에서 비판적 안목을 키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까지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불경의 가르침을 연상해 보자. 교수가 여러 학설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겠지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 교육자의 주관을 배제한 채 앵무새처럼 다른 사람의 이

야기만 전달해주는 것이 꼭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객관과 소신을 균형되게 펼쳐 나가되, 학생들이 기존의 학설은 물론이요 교수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까지 비판을 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의해 나가는 것이 요망된다. 대학의 안팎을 불문하고 비판이 활성화 될 때 학문의 자유가 꽃 피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

서병훈/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라이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다시 시작하는 혁명 : 아옌데와 칠레식 사회주의』, 『열린 유토피아 : 존 스튜어트 밀의 사회주의 사상』 등이 있다.